야7당 원내대표 회동…거부권 공동대응

박찬대 "민주화 이후 최악 기록"
"이 정도면 尹, 거부권 중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현 정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박찬대·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회동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야 7당은 단일 대오를 형성해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번이 19번째라고 지적한 뒤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참 무도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우게 된다"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심과 개혁이라는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월 민생 국회는 멈추지 않는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쌓여있으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도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며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민석, 조국혁신당 조국,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민주 친명계 의원 주도 민생·경제 정책 연구 공부모임 확산

김태년·정성호 등 잇단 결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민생·경제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공부모임이 확산하고 있다.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전 대표의 '2기 체제'가 확실시되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 강조한 '먹사니즘' 관련 정책 논의를 일찌감치 시작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통'인 5선 김태년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는 민주당' 공부 모임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4선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의원, 3선 김성환 김영진 박정 의원, 재선 박수현 복기왕 윤준병 의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전 의원이 '양극화 현상과 서민 경제'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은 서민 대상 정책자금 지원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임은 대안을 제시하고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며 "서민경제 위기의 핵심인 과도한 부채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를 맡은 기본사회포럼은 이날 '대전환의 시대-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자 이 전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 비전이다.

이 포럼에는 민주당 정성호 천준호 장경태 민병덕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RE100은 지난 대선 민주당의 산업 분야 핵심 정책 공약으로, 이 전 대표가 여전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과 함께 남인순, 김성환, 김영환,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여야, 28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합의

27일 대통령실 등 현안 질의
방송4법 등 재표결 가능성도

여야는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현재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꼽힌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외에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희망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도, 쟁점 있는 법안도 있다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가 돼서 필요한 각료를 불러서 같이 법안처리나 예산을 처리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실무형으로, 나와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미 만나서 실무형 회담을 계속하고 이런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尹 "가짜뉴스 범람…언론 역할과 책임 중요"

한국기자협회 60주년 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가 더 크게 도약하고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도운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범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신뢰하는 사회적 자본을 함께 키워야 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해 우리 언론이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964년 기자협회가 창립한 이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언론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기자협회가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경호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후 검토 가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우탁)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온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역시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 고유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선 "독립운동을 존중, 존경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슴 속에 담고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한다는 정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